



한일협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밀실협정으로 빼앗긴 우리 권익을 되찾자

한 상 범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전 의사신문사규명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군사정권의 3대 반(反) 민족성과 민주성은 첫째 무엇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탈취한 것을 비롯하여, 둘째 만주(중국동북)에서 부역한 친일파가 집권하여 이승만 정권 때보다 더 일제잔재를 부활·확대시킨 것이며, 셋째 특히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밀실협정으로 강행 체결한 것이었다.

1964년 이후의 한일협정 반대투쟁에 참여하여 그 고난의 시련을 체험하거나 또는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보면 내 표현이 감정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실상 조금도 그렇지 않다. 여기서 내가 겪

은 당시의 상황을 몇 가지만 들어보자.

당시 비열한 군사정권의 밀실협정 굴욕외교는 거족적인 반대에 부딪혀 박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 시위과정에서 학생이 경찰의 몽둥이에 맞아죽고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고문을 당한 뒤 구속되었다. 굴욕외교 반대 발언으로 양주동 교수 같은 노장학자는 대학에서 쫓겨났으며,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원이 반대 인사와 단체에 대한 매수와 협박, 감시와 연행 심문 등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필자처럼 교수단 시위와 집회에 참여하고 반대서명



이탈의 이슈

한일협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한일협정 체결 전에 이미 일본 상사로부터 6천 6백만 불을 받았다고 한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 간신히 일본 측으로부터 3억 불을 무상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청한 소송을 통해 우리 외교부가 관리·보관하고 있던 외교 문건의 일부가 지난 1월에 공개되었다. 그것을 통해 한국 측의 비굴한 양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반(反) 민족성과 민주성

왜 이토록 박정희 정권은 쫓기듯 한일협정 체결을 강행했을까? 그 당시에도 짐작한 바이지만 내외로 조성된 미국과 일본의 압력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었다. 우선 쿠데타를 통한 집권으로 정통성이 결여됐기에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허약한 정권이었다. 그래서 대내외의 정치공작에 돈이 필요했다. 군정은 비밀리에 자기들만이 정당을 조직한 것을 비롯해 각계 인사의 매수와 전국적 밀고 정보망 구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돈을 정보공작에 쏟아 부었다.

또한 가장 무서운 압력은 월남전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강권(強勸)에 가까운 요구였다.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시아의 반공 보루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한일동맹의 전제로서 한일국교 타결을 박정희 정권에게 강요했다.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역사 이래 최고의 경기를 누리며 떼돈을 벌었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기생하는 '전쟁기생국가(戰爭寄生國家)'로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한국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공개된 협정 문서에서도 나타나지만 결국 그러한 국제 상황에서 박정희는 '한일국교 타결카드'로 미국에 투항하면서 승

을 했던 젊은 교수들도 당국의 탄압을 받았으며, 학교 당국과의 관계도 불편해져서 괴로운 처지에 놓였었다.

군사정권의 한일협정을 당시 국민들은 왜 '굴욕외교'라고 했는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한일교섭의 특사로서 일본의 오히라와 일본 요정에서 일본 기생(게이사)의 시중을 받으며 마후 밀실협정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김종필은 공공연히 떠들어대길 "내가 제2의 이완용 소리를 들어도 해내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2004년 미국에서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부 문서에 의하면, 박정희는



◀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상이 회담을 갖고 있다.
▼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소장과 그 주역들(사진 김천길)



부를 건 것이다.

그것은 일제의 피해자인 국민 대중의 중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서 국익 고수와 관철은 자국의 국민을 위한 기본 상식임에도 군사정권이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송두리 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따른 강요

박정희 군사정권의 그늘에서 살핀 무리와 박정희 신화에 세뇌된 사람들은 한일협정 등 박정희의 행적을 미

화시키는 일에 적극 매달리고 있는데 이는 과연 옳은 것일까?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박정희 정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을까?

먼저 한일협정은 외교문서의 성격상 강화조약도 아니고 통상조약도 아닌 애매모호한 국제문서이다. 원래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을 당사자로 초청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담합하여 한국을 빼버린 채 한국에 관한 조항을 제멋대로 조약에 집어넣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와 3조의 영토와 재산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한국을 초청 당사자로 하지 않고 미국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이미 그 이전에 일본 주재 맥아더사령부는 1946년부터 시작된 일본 군국주의 전범에 대한 재판 때부터 주로 일제의 침략에 따른 범죄시기를 1928년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에 대한 침략문

제는 일체 제외시켰었다. 그러한 미일정부의 처사에 대해 이승만 정부나 박 정권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었다. 한일기본조약에는 조약 체결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배상 문제는 아예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가해행위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조약의 성격 자체가 강화조약이 아니어서 일본 침략에 대해 고스란히 면죄부를 안겨 주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민족과 국가로서 스스로의 입지를 포기하고 가해 측과 합작해서 피해자인 한국 국민의 처지를 저버리고 배신한 것이었다.

불투명한 조약의 성격

특히 이른바 청구권을 비롯해 재일교포의 지위와 어업관계 그리고 문화재 반환 등이 협정에서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은 위에서 밝혔듯이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불가피한 결과였다.

가장 통탄할 일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저지른 죄악이다. 동포가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당해서 죽고 병신이 되고 병들고 가족이 흩어지고 파산했던 징용·징병·군속 복무와 원폭 피해 등을 비롯해 정신대로 끌려가 중군 위안부가 된 우리의 딸들을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재일동포나 사할린으로 끌려가 버려진 동포에 대한 유기는 무엇보다 큰 죄라고 할 것이다. 군사정권의 무리들은 그들의 생명과 피눈물의 대가를 가로채 자기들이 함부로 쓰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억지논리로 남을 희생시키고 대가를 가로챈 이들은 누구인가? 순리적인 경제발전을 외면·저지하고 '개발독재'로 이끌어 재벌을 살 찌우고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자를 희생시킨 정경유착의 죄과는 지금에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축재를 환수해야 한다. 그들의 부정축재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하는 것이 민족정기 회복과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맞는 일이라고 하겠다.

개인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박탈

세계의 어느 법리를 통해 봐도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고 말소할 권한은 없다. 군사정권이 우리 동포의 권리를 말소시키는 방식으로 협정



을 마무리 지은 것을 일본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강조해 왔다. 징용·징병 등으로 강제연행 당하여 생명과 노력을 제공해야만 했던 일제 치하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일본제국신민(日本帝國臣民)' 이라고 하여 조선 사람을 붙잡아가서 마구 부리다가, 패전 후에 연금이나 배상·보상조치를 할 때에는 돌변하여 그들은 일본 국민이 아닌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며 우리 동포들을 무권리상태로 유기했다. 일본 정부나 법원은 이 잘못된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일관되게 배상 또는 보상을 거부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법원의 잘못된 법리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주일 대표나 관계 요직에 친일파를 배치함으로써 재일동포에 대한 정책을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시행했다. 재일동포는 협정체결 후에 협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차별과 천대를 받아 왔다. 사할린 동포는 지금까지 버려진 채 방치되어 왔다. 사할린 출신 작가인 이희성이 쓴 사할린 배경의 작품을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동포가 있을까!

일제 패망 이후 정부가 수립되었으면 일제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역사적·법리적으로 연구하고 그 자료를 수집·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친일파가 주역이었던 정부는 자기들 친일파의 죄악이 곧 일제시대 가해행위

의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기피 내지는 방해해 왔다.

역사학계에서도 재일교포 역사학자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같은 실적을 좌익으로 몰아 외면했고, 1986년에 그의 저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가 국내에서 출간되었지만 금서취급을 당했다.

한일협정 체결 30년을 맞은 1995년 당시의 김영삼 정부는 태생적으로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였다. 재야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렇듯 잘못된 협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한일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인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이 단체의 주관으로 1996년에 한일협정 개정을 위한 개정 요강 발표대회가 있었으며, 1997년 1월에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프레스센터에서 특별회견을 갖고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외무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기자와의 회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일본의 언론과 학계에서도 주목하였으나 우리 외무부는 일관되게 이 문제를 무시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밀실

홍정의 주역인 김종필이 총리로 있는 정부였으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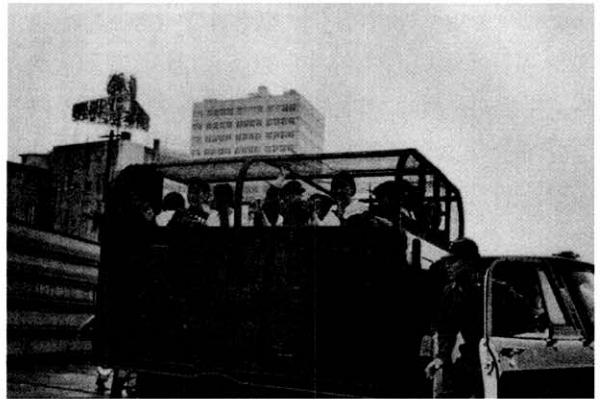
그 이후 나는 『순국』이란 잡지에 두 차례 글을 발표하면서 한일협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로서 1) 그동안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 2) 그에 따른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도 크게 변화 3) 당시 한국의 군정이 정통성을 결여해 월남전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압력으로 졸속 타결했던 점 4) 지금은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재차 제시했다. 초점이 된 논점은 앞서도 밝혔듯이 불투명한 조약 성격의 시정과 개인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보완해야 할 것 등이었다. 그 일부를 인용해 본다.

한일협정 개정을 위한 기본요강 초안

1.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을 전면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라.

(1) 전문(條約 前文)에 일제의 침략경위와 사죄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미래의 한일친선우애의 정신을 선명(宣明)한다.

(2) 그에 따라 배상과 보상의 재검토와 보완사항의 필



한일회담 반대투쟁 당시 성군관대에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군인들(왼쪽)과 시위 학생들을 '닭장차'에 싣고 연행하는 장면(오른쪽) <사진 김천길>

요성을 명시한다. (이하 일부 생략)

2. 기본조약 외에 제협정에서는 배상과 보상 및 그간의 사정 변경에 따른 조약을 개정하고 보완한다.

(1) 개인의 배상과 보상에 대한 누락사항을 보완한다. 특히 징병, 징용, 군속,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하 일부 생략)

한일 두 나라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즉시 협정 문서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백서를 발간하여 두 나라 국민과 세계 평화애호시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아울러 두 나라 정부가 그에 따른 시정조치에 성의 있게 외교 교섭을 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와 유족, 시민단체와 정당에 대한 주문

현재 일제하강제연행자의 피해자와 그 유족은 현행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조치 등이 마무리 지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제까지 강구해 온 소송 등 법적 대응이 계속해 진행되었지만, 그밖에 정부의 적절한 입법조치가 한일양국 정부간의 외교적 보완조치와 병행되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그 정권이 남긴 모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승만 정권이 모든 국민을 전제군주시대의 '우민'으로 내려다보면서 다루었다면, 군사정권은 모든 국민을 '이등병'이란 명령 대상의 객체로 취급해 왔다. 결국 그러한 권력 행사는 나라와 사회를 '병영화(兵營化)'시켰고 그것은 '감옥화(監獄化)'를 통해 가능했다.

군사정권 시절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고통과 부담은 실로 어둡고 괴롭고 두려운 나날이었다. 그 정권유지의

일상 수법은 계엄통치와 같은 강권 지배와 정보공작, 감시밀고체제라는 암흑 사회화로 특징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군사정권의 핵심 주역은 정보장교들이었다. 박정희는 정보장교이고 여순반란 연루자로 불명예 제대된 신분에서 육군 정보실 무급문관(군속 - 군무원)이었다. 김종필도 정보실 소속 장교였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보안사령관을 역임한 정보장교 출신임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신군부에선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현재 기무사)가 정치공작의 주역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한일협정의 잘못된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그 상처를 치유코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 주요 일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이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들은 친일파와 맥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른바 '유지'이고 '명망가'이며 '원로'로까지 자처하는 기득권층이다. 실제로 그들은 요직에 포진한 실세로서 명예를 비롯해 돈과 지위 등 온갖 기득권을 틀어쥐고 있다.

한편 일제시절로부터 독재시기를 거치며 피해 당사자였던 일반 국민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불우한 처지로 항상 응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개혁의 과정은 일제와 독재 하의 투쟁 못지않게 고달프고 외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해 당사자인 개혁을 요구하는 주체는 스스로 단결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개혁은 점잖은 소풍놀이 같은 것이 아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온갖 반대에 대한 목숨을 건 대결이고 투쟁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다른 시련의 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